

의안 번호	1526	【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2. 7.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7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2. 19.(화)

2. 제안이유

「경관법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《울산광역시 중구 경관계획》

가. 계획의 범위

- 1) 공간적 범위: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전역
- 2) 시간적 범위: 기준년도 2018년, 목표연도 2030년

나. 계획의 내용

- 1) 경관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, 경관자원의 조사·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, 경관의 기본구상, 경관기본계획
- 2) 특정경관계획(야간경관계획) 수립, 경관 부문별 계획 수립(유형별, 요소별),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 수립

《경관실행계획》

가. 관련제도, 경관사업, 경관협정, 경관심의, 중구 경관조례,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 수립

나. 「경관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구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경관시범사업 시행계획(안) 마련

4. 근거법규

- 「경관법」 제6조
- 「경관법」 제11조제3항(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5. 검토의견

- 상위법령인 「경관법」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폭넓은 의견을 반영 하였으며, 다만,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 외 추가 또는 보완할 구역은 없는지, 경관 시범사업 6개사업 소요예산 1,965백만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가 요구됨.

근거법규

경관법

제6조(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경관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경관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국토경관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
2. 경관정책의 기본목표와 바람직한 국토경관의 미래상 정립에 관한 사항
3. 국토경관의 종합적·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
5.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
6.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
7.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경관에 관한 중요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등 경관과 관련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,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

지사"라 한다)

2. 시장〔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(이하 "행정시장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〕·군수(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

3. 행정시장

4.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광역시의 군수(이하 "구청장등"이라 한다)

5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(이하 "경제자유구역청"이라 한다)의 장(이하 "경제자유구역청장"이라 한다)